평화당 전당대회 레이스 돌입

유성엽 의원 "새 정당 건설… 과거 아닌 미래로 나아가야" 지지 호소

민주평화당 전당대회를 맞아 유성엽(민주평화당, 정읍·고창·사진) 의원이 당대표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이번 선거는 단순히 당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 1% 정당이 시한부로 사라지느냐 아니면 기적적으로 기사회생 하느냐를 결정짓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변화라는 노력 없이는 기적도 바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도대체 언제까지 케케묵은 이념 논쟁에만 매달릴 것인가"라고 성토하며, "우리 민주평화당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현장정치, 민생정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는 전적으로 당원 여러분의 투표에 달렸다"고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변화는 간판의 교체로부터 시작되며, 이미 평화당의 새로운 바람은 유성엽을 향해 불기 시작했다"라고 자평하며, "당대표가 된다면, 유성엽 원 맨 당이 아니라,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선배님들과 함께 '팀 리더쉽'을 꾸려 함께가는 정치, 진정한 정당정치로 새로운 평화당을 건설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진성 기자

"기무사 문건에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무사 문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백승주 국방위 간사.

박지원, 김성태 성 정체성 발언 맹비난

"인권 저버리는 몰염치한 발언"

박지원(사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1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성 정체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인권을 저버리는 참으로 몰염치한 발언"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얼마나 궁지에 몰리면 그런 막말을 하겠냐"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다분히 화풀이로, 그러한 자기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약점을 잡아서 공격한 것인데 이것은 천부적 인권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파렴치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북한의 인권을 개선시키자고 말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 박 의원은 "비대위원장으로 거론이 될 때부터 저는 김 위원장이 맡게 될 것이라고 했고, 그 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기무사 문건을 질 낮은 위기 대응 매뉴얼이라고 하고, 대통령의 먹방 규제가 국가주의라고 비판하고 있고, 한국당은 캠코더 인사를 비판하는데 청와대, 민주당에서는 참으로 무능하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나가는 것은 대권을 준비하고 있다고 본다"고 관측했다.

/뉴시스

한국인, 리비아 무장단체 납치… 27일 억류

우리 국민 포함 총 4명 납치 동영상 공개, 외교부 "협상하겠다는 의미 접촉 올 것"

리비아 지역에서 우리 국민 1명이 무장민병대에 납치, 27일째 억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1일 "지난달 6일 리비아 서부 자발 하사우나 지역에서 우리 국민 1명과 필리핀인 3명이 무장민병대에 납치돼 억류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피랍된 우리 국민 소속 회사 관계자는 지난달 6일 오전 8시55분께(현지시간) 무장민병대 10여 명이 현지 물 관리 회사 외국인 숙소에 난입해 물건을 강탈하고 무작위로 직원들을 납치했다고 신고했다.

이번에 납치된 우리 국민은 60대 초반의 물관리 회사 부장으로 한국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 리비아에서 혼자 장기 체류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218뉴스'라는 리비아 유력매체 페이스북 계정에는 피해자로 보이는 이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으며 대사관 직원이 발견해 알려왔다"고 말했다.

영상에는 한국인을 포함한 4명이 '제발 도와 달라'고 말하고 있고, 납치 세력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총을 들고 피랍자들 뒤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다만 납치세력은 자신들의 신원, 정체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특별한 요구사항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당국자는 "오늘 영상은 협상을 하겠다는 의미로 분석하고 있다. 조만간 요구사항 제시하고 접촉해 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우리 국민의 생존은 확인됐고, 일단 외관상 수염이 더부룩하지만 건강은 양호한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납치세력과 직접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견지하면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 리비아 당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앞서 외교부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6일 곧바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오후 9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우리 국민의 소재를 파악하고 안전한 귀환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또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국내 언론에 엠바고(보도유예)를 요청해왔다.

주리비아대사관도 신고를 접수한 직후 대사를 반장으로 하는 현지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리비아 외교부와 내무부 등 관계당국과 접촉해 사건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 대사와 공관 직원 2명을 가장 빠른 항공편으로 리비아로 급파했다.

합참도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일 오후 8시18분께 아덴만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를 피랍 현지해역으로 급파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리비아 정부가 사건 직후 부족과 접촉을 하고 있다. 리비아 정부도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수사를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 하에 국민 소재지 파악이나 무장세력 성격을 계속해서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민주 전대 후보, 공명선거 실천 서약

秋 "흠집내기 자제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차기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에게 "도 넘은 네거티브나 흠집 내기는 자제하고 격조 있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명정대한 선거를 실천하기 위한 서약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송영길·김진표·이해찬 의원 등 당대표 후보와 김해영·박주민·설훈·박광온·황명선·박정·남인순·유승희 의원 등 최고위원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약서에 서명을 했다.

추 대표는 "집권당이다. 누가 되더라도 책임 있게,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포용성, 책임성을 보여줘야 하는 당"이라며 "어려움은 함께 극복해내고, 반드시 문재인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전당대회가 있는 것인 만큼 우리끼리 도 넘은 네거티브나 흠집 내기는 자제하고, 그것은 본인의 인격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품격 있고, 격조 있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김진표 "김경수 피의자 전환, 한마디로 침소봉대"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후보인 김진표 의원은 1일 드루킹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한마디로 침소봉대"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은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이 굳건했었는데 드루킹이라는 자에게 의존하면서 정책을 만들었다, 공약을 만들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진짜 문제는 수사내용이 언론에 흘러나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특검이 의도적으로 흘리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결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 재판으로 몰아가면서 불행한 일까지 벌어졌는데 지금도 그런 행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범죄를 수사하라고 국민세금으로 특검을 만들어 줬는데 피의사실 공표죄를 저지르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특검도 예외가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폭염, 자연재해 포함 법 개정"

김태년, 피해 최소화 강구

김태년(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지속되는 폭염이 자연재해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폭염을 재난안전법상 자연재해에 포함시켜 정부가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8월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폭염이 역대 최장, 최고의 폭염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구온난화를 봤을 때 올해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는 전문가 분석도 있다"며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법 개정 이전에도 폭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폭염이 길어지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요금체계 개편이나 부과세 환급 등 다양한 방법을 즉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뉴시스